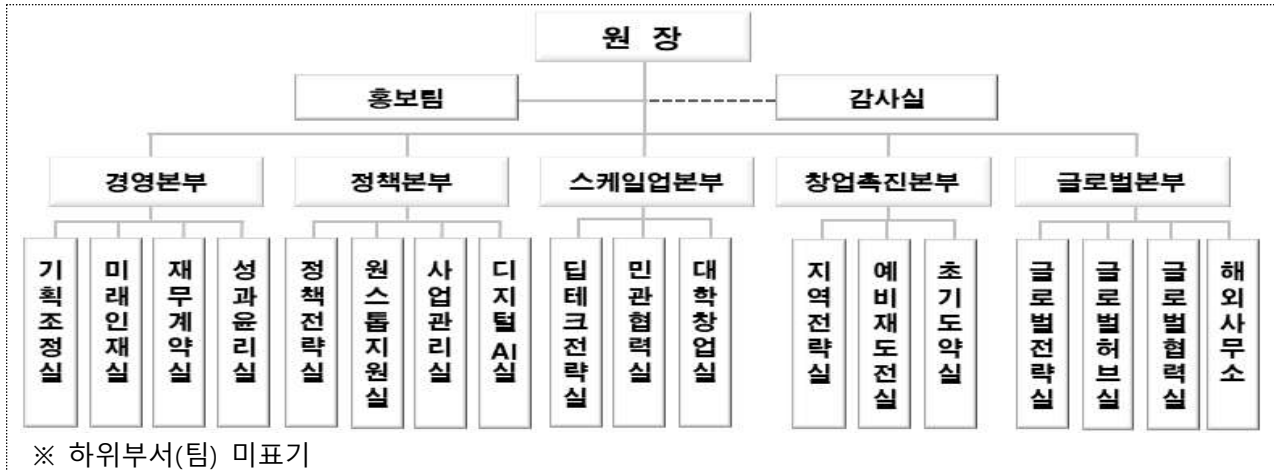

창업진흥원 업무보고

2026. 1. 12.

I. 일반현황

① 기구 및 조직 현황 (설립 : '08.12.24, 근거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)

○ 5본부, 18실, 1해외사무소, 6팀 * 본부 소재지 : 세종특별자치시



② 인원 현황 (정원 241명 / 현원 231명) * '26.1.기준

구 분	직급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무기직
합계	정 원	241	1	8	13	30	49	84	1	55
	현 원	231	1	6	12	30	50	81	1	50
세종 (본부)	정 원	224	1	7	12	28	44	82	1	49
	현 원	214	1	5	11	28	45	79	1	44
서울	정 원	13	-	-	1	1	4	2	-	5
	현 원	13	-	-	1	1	4	2	-	5
대전	정 원	3	-	1	-	1	-	-	-	1
	현 원	3	-	1	-	1	-	-	-	1
실리콘 밸리	정 원	1	-	-	-	-	1	-	-	-
	현 원	1	-	-	-	-	1	-	-	-

③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 감 (B-A)	(B-A)/A
계	831,219	813,550	△ 17,669	△ 2.13
창업저변확대	19,713	19,415	△ 298	△ 1.51
창업사업화지원	457,500	461,771	4,271	0.93
민관협력창업자육성	186,281	207,856	21,575	11.58
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	87,208	63,744	△ 23,464	△ 26.91
중소기업재기지원	16,629	14,966	△ 1,663	△ 10.00
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	50,383	23,298	△ 27,085	△ 53.76
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	13,505	22,500	8,995	66.60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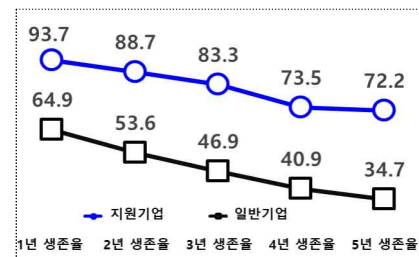
① '25년 및 그간의 지원성과

□ '25년 성과

- (정책 신속 집행)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·육성 등 추경예산을 포함한 창업사업화, 재창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신속 집행
 - * '25년 창업지원 최초 공고('25.1.23.~) 및 추경사업 지원공고('25.7.11.~) 신속 추진
- (혁신 스타트업 발굴·육성) 딥테크·팁스·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, 가시적 성과 창출
 - 특히, 딥테크 기술 분야는 유니콘 등극, 코스닥 상장 및 누적 투자 유치 7,702억원 돌파 등 지원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
 - * (유니콘) 퓨리오사AI, (코스닥 상장) 노타, 링크솔루션, 에스투더블유 등
- (지역 창업 활성화) 창업중심대학(9→11개, 충북·전남대)을 확대하고, 지역 주력산업 지원 및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, 네트워킹 등 추진
- (글로벌 지원 강화) 창업기업 해외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(실리콘밸리)에 통합형 해외거점을 구축, 스타트업 현지 지원체계 마련
 - * 현지 월별 네트워킹 운영(8월~) 및 스타트업-빅테크 현지 기업 매칭 지원(10월~)

□ 그간의 창업지원 성과

- '08년 설립 이후, 창업 전문기관으로서 매년 평균 약 6천여개의('25년 6,603개사) 창업기업 발굴, 총 7.8만여개의 유망 기술 창업기업 육성
- (기업 생존률) 지원기업 1년 생존율은 93.7%로 일반기업(64.9%) 대비 높은 수준
- (기업공개) 536개 창업기업이 기업공개 실현, 93개 기업이 증권시장 상장



스타트업 지원에 “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”으로 선정

-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(스타트업얼라이언스) / '20~'25년 6년 연속 1위

2 보완점 및 업무추진 방향

- **(전달체계 고도화)**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와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 및 지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필요
- **(애로해결 체계 마련)** 창업 예비·초기 단계부터 직면하는 법률·회계 등 복합 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은 강화가 필요한 상황
 -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·세무·경영 등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창구(One gate) 필요
- **(혁신 스타트업 발굴·육성)**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「초격차 스타트업」, 「팁스」 사업을 통해,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
 -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AI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필요
- **(글로벌化 촉진)** 글로벌 전담본부·해외사무소 신설 및 인·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
 -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,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현지 안착 지원 강화 필요
- **(지역생태계 활성화)** 우리나라 창업 환경은 글로벌 상위 수준(세계 20위)이나, 창업 혁신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“창업 생태계 양극화” 존재
 - * 글로벌 창업도시 '24~'25년 순위 비교(StartupBlink) : (서울) 21위 → 20위 (대전) 429위 → 366위 (부산) 366위 → 393위 등
 - 전 국민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하고, 자유롭게 소통·교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수준의 집적 공간 조성·운영을 통한 창업 열기 확산
- **(정책 역량 강화)** 창업생태계 동향 보고서 발간 및 정책 포럼 등을 운영,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
 - * KISED Insight(격월 발간, '25년 6회) 및 자체 정책포럼 개최(5월) 등
 - 다만, 다년간의 사업 집행 중심의 운영으로, 정책 연구, 수요기반 정책 발굴 및 데이터 분석 등은 강화가 필요한 상황

- **(창구 일원화)**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단일창구(One-stop)에서 해결하고, 파편화된 정보를 집약·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



"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에 회계, 법률, 특허, 투자 계약까지 다양한 부분의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데,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" (간담회, '25.10.)
"사업공고가 고시되는 경로가 '비즈인포(기업마당)', 'K-스타트업 포털' 등으로 다양하여 하나의 통합 채널 필요" (T기업 대표)

- **(딥테크 육성 강화)** AI, 로봇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실증 지원 등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



"현장 중심 기술 실증을 통해 특정 장소(하천 등), 목적(시신 수색, 증거 판독)을 위한 아이템 고도화 및 피벗 가능" (경찰청 협업 예시_G기업 대표)

- **(글로벌 지원체계 마련)**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, 해외거점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현지 안착 지원 강화



"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확보 및 현지 밀착지원이 필요. 특히, 초기 단계는 해외시장 접근 자체가 한계" (벤처스퀘어 설문결과 요약)
"전 세계 창업가들이 교류·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필요" (A기업 대표)

- **(지역창업 활성화)**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 지역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 하고, 수도권 수준의 집적 공간 조성·운영을 통한 창업 열기 확산



"기술·창업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, 비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 육성 강화 및 지역별 개방형 인프라 운영 필요" (지역 B 스타트업 대표)

- **(제3자 부당개입 근절)**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,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



"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해 브로커를 활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. 15%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" (C기업 대표)
[언론보도] 파이낸셜 뉴스, A스타트업, 정부 '눈먼돈' 8억 골격('25.11.6)

Ⅲ. 중점 추진과제

미션

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
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

비전

국민의 성공적 창업을 실현하는 글로벌
“K-창업리더”



중점 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
【과제 1】 수요 기반 창업지원 전달체계 고도화	① 수요자 중심 창업 서비스 개선 ② 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및 확산 ③ 내부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 강화
【과제 2】 현장 중심 애로해결 플랫폼 구축	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본격 가동 ② 신산업 규제 발굴 체계 마련
【과제 3】 고성장 K-유니콘 발굴 기반 마련	① 혁신·딥테크 분야 창업지원 확대 ②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지속
【과제 4】 글로벌·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	① 글로벌化 촉진을 위한 지원 고도화 ② 수도권 수준의 지역 인프라 구축

1 수요자 중심 창업 서비스 개선

◇ 창업기업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편의성 제고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

□ 수요자 중심 사업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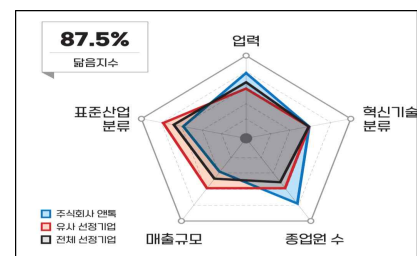
- (서류 ZERO화) 사업 신청 시, “사업계획서” 1종만 제출토록 개선
 - 참여신청서, 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하고,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추진

< 신청시점 공통 제출서류 개선(안) >

현행		⇒	개선(안)	
① 참여신청서	온라인 입력 또는 파일 첨부		① 참여신청서	온라인 입력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	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
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온라인 입력 또는 파일 첨부		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온라인 입력
④ 신분증 사본	파일 첨부		④ 신분증 사본	마이데이터 연계
⑤ 사업자등록증	파일 첨부		⑤ 사업자등록증	마이데이터 연계

- 서류 제출 방식 개선(後 제출) 및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한 서류 정비 등 수요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('26~)
- (상담 체계 고도화) 시간제약 없이, 창업기업 및 주관기관 등 사용자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기반 챗봇 개발·운영('26.2~)
 - * 시범 운영('26.1~2)을 거쳐 서비스 개시('26.3)하고, 지속 기능 고도화(~'26.12)

- (답음지수 제공) 창업기업 사업 신청 단계에서 과거 동일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군과 비교, 사업적합도에 대한 자가 진단 서비스 제공('26.下)



- 신청기업 속성 및 규모 등을 활용하여 과거 선정기업과 비교·시각화
- (접수시스템 개선) 창업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의 불필요한 클릭과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UI/UX 개선

<참고> 접수시스템 UI/UX 주요 개선

- (자동입력 서비스 고도화) 창업사업 신청 시 입력할 사항을 국세청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

기존(As-is)	개선(To-be)
회원가입 시 입력한 회원 정보 기반으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동 입력	⇒ “기업정보 불러오기” 버튼을 추가, 국세청 등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동 입력

- (사업비 등록 편의성 개선) 창업 지원금 사용 시 사업비 승인 요청 및 등록 절차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화

기존(As-is)		⇒	개선(To-be)	
승인 요청	• 이용 빈도 높은 ‘사전승인신청’ 기능 진입 시 “클릭 2번” 필요		• “클릭 1번”으로 접근하도록 개선하고, 이용 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재배치	
사업비 등록	• 사업비 등록 화면과 등록 시에 필요한 증빙 조회 화면이 “분리”		• 사업비 등록, 증빙 조회를 “단일 화면”으로 구성, 페이지 이동 없이 업무처리 가능	

- (사업 관리·강화) 창업사업 공고를 연초에 완료하여 충분한 사업 수행 기간을 보장하고, 평가결과 피드백 제공 등 환류 강화

□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수급 최소화

- (중복성 탐지 강화) 기존 키워드 중심의 중복 탐지 기능을 개선하여 AI 기반 문맥·이미지 분석 기능 도입('26.1.~)

- (문맥 기반 중복 검토) 기존 단어 중심에서 사업계획서 문맥·의미를 기반으로 어절을 비교하도록 기능 고도화
- (이미지 중복 검토) AI-OCR* 기술을 탑재하여 사업계획에 삽입된 이미지의 중복·유사 검토 및 텍스트 추출이 가능토록 개선

* AI 기술(AI-OCR) 탑재를 통해 문맥·의미·이미지 등의 중복성 판단 기능 구축

- (신고·적발 체계 도입) 익명 신고 채널*을 운영하고, 불법 개입자 의심 활동 수시 점검 및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캠페인 전개('26.1.~)

* 창업진흥원 누리집 - 고객광장 - 제3자 부당개입 신고

2 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및 확산

◇ 예비→초기→도약→재도전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특화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및 우수 사례 등 성과 확산

□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발굴·육성

- (단계별 창업지원 지속) ‘예비→초기→도약’ 및 ‘재도전’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·육성

<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 구성 >

구분	① 예비	→	② 초기	→	③ 도약	→	④ 재도전
사업	예비창업패키지		초기창업패키지		창업도약패키지		재도전성공패키지
지원 내용	BM 고도화, 시제품 제작 지원 등 (사업화 자금 최대 0.8억원)		실증 및 판로 개척, 초기 투자유치 등 (사업화 자금 최대 1.5억원)		대기업 협업, 투자병행 지원 등 (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)		특화 재창업교육, 재창업자금 연계 등 (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)
대상	예비창업자		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		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		(예비)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규모	750명 내외		614개사 내외		460개사 내외		185명 내외

- ① **예비창업패키지** :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준비(시제품 제작 등)와 창업시장 안착을 지원
 - 주관기관(26개 기관)별 **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**을 통해 발굴·육성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정(상위 3명, 총 78명)
 - 선배·동문 창업자 중심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성장 코칭 제공
- ② **초기창업패키지** :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(시장진입, 초기 투자유치 등) 프로그램 지원
 - 공모방식 외 **성장사다리형, 민관추천형** 등 다양한 선정방식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연계지원(우선선정, 서류면제 등) 혜택 제공
 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자 “심층 인터뷰”를 실시하고,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증 및 판로 지원 강화

③ **창업도약패키지** : 도약기(3년~7년)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추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융·복합 지원

- 대기업과 - 창업기업 간 협업을 위한 밋업(Meetup) 네트워킹 및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한 M&A 프로그램(역량강화 교육·컨설팅) 등 연계

④ **재도전성공패키지** : 사업 경험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(예비)재창업자 대상 패키지식 재기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

- ‘재도전 응원본부’를 통해 인식개선, 네트워킹 및 정책정보 일괄 지원
- 심리치유(회복→통찰·인식→심리강화) 등 재도전 맞춤형 교육 강화

○ **(자기부담금 완화)** 창업기업 자기부담율(現 30%)을 비수도권 유형에 따라 최대 10%(^{특별}10% / ^{우대}20% / ^{일반}25%)까지 감면 검토

* **특별지원** : 균형발전 및 예타 낙후도 하위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0개 시·군

우대지원 :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·군

일반지역 :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·우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83개 시·군

□ 정책 대상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 강화

○ **(권역별 순회 설명)** 창업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정책 대상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모집 홍보를 위한 5개 권역 설명회 추진('26.1)

- 사업 설명 외 사업 담당자 중심의 1:1 멘토링 등 상담 부스 운영

< 권역별(창경센터) 개최 일정(안) >

수도권		충청권		경상권		호남권		강원권	
서울	1.19.	대전	1.9.	대구	1.13.	광주	1.16.	강원	1.21.
	1.23.		1.14.		1.20.		1.22.		-

* ('25년) 5회, 696명 → ('26년) 9회, 1,200명 예정

○ **(우수 사례 확산)** 창업 정책 홍보 및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 우수기업을 K-Startup 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개

- 포털 내 ‘정보제공’ 기능을 고도화하여 스타트업 아이템 홍보 병행

* 사업 성공판정 기업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공개 검토

3 내부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 강화

◇ 정책 수요자(스타트업)와 공급자(정부) 간의 가교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인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

□ 창업 정책 전문기관으로 전환

- (정책 기능 제고) 국내외 창업생태계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내부 역량을 활용한 조사·연구를 통한 (비)정기간행물 기획·제작 확대

* ('25년) 6회(Insights) → ('26년) 18회(기존 Insights 6회 + 신규 브리프 등 12회)

- 창업 전반에 대한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루는 기존 간행물 발간 뿐만 아니라, '심층·단발적 이슈' 중심의 간행물 추가 기획

< (비)정기 간행물 운영(안) >

구분	내용	비고
인사이트(정기)	창업 전반에 대한 미·거시적 정보 및 동향 제공(年6회)	기존
이슈 페이퍼(비정기)	창업정책 개선·개발을 위한 '심층 이슈' 분석(年6회)	신규
이슈 브리프(비정기)	산포적으로 생산되는 '단발적 이슈' 분석(年6회)	

- (수요기반 정책 발굴) 정책 수요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시 의견수렴을 통해 산·학·연 전반에 걸친 정책 발굴 노력

*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스타트업 포럼 개최 예정(상·하반기 1회)

< 포괄적 정책발굴 추진(안) >

구분	내용	비고
정책자문단	산업계(스타트업 및 투자사 등)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상시 수렴	현장중심
정책세미나	학계·연구계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적 의견을 수렴·논의	연구중심

□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마련

- (데이터 분석 강화) 내부 데이터분석팀을 신설('25.11.),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성과관리 및 분석 등 단계적 활용도 제고('26.~)

* 보유 : K-Startup 창업지원포털(사업 공고 정보), PMS(신청자 정보) 등 정형데이터

- (대조군 기반 성과 분석) 대조군 기반 성과평가* 방식 도입을 통한 창업사업의 효과성을 조사·분석하여,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

* 기존의 이력성과 조사방식에서 "대조군 기반 성과평가 방식"을 추가 도입·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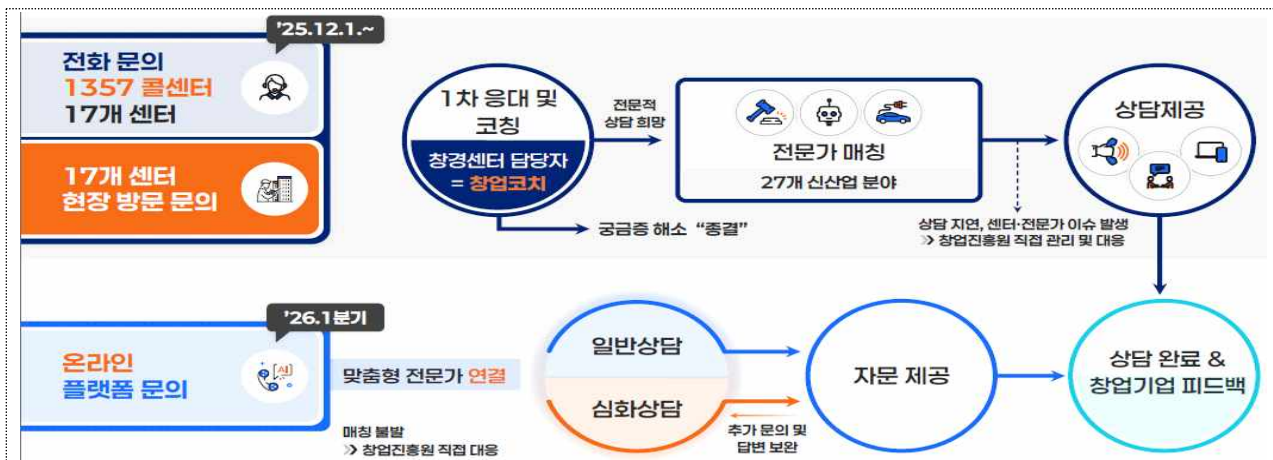
4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본격 가동

◇ 창업가들의 창업사업정보 제공 및 법률·세무·경영 애로 등을 단일 창구(One gate)에서 해결하는 온·오프라인 지원체계 마련

□ 스타트업 고민 해결,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

- (원스톱 지원센터 운영) 온·오프라인 센터를 병행 운영하고, 창경 센터에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 접수·처리 체계 마련
- 사업 안내 등 단순 문의는 즉시 해결하고, 자문 필요시 4단계(①문의 → ②신청·접수 → ③전문가 상담 → ④사후관리)로 신속 연계

<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절차 >



- (우수 사례 확산) 찾아가는 사업설명회(로드쇼 등), 지역별 창업 행사 등과 연계하여 센터 원스톱 기능 및 우수사례 대국민 홍보 추진
- (가이드 제작·배포) 상담 내용과 답변 빈출 사례를 FAQ 및 현장 지침서로 제작·공개하는 등 현장 활용도 제고

□ 온라인 창구 개발 및 AI 도입 등 수요자 편의 제공

- (온라인 창구 구축) 창업기업이 시간·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개발·운영(~'26.1분기)
- * 창업지원사업 검색과 맞춤형 추천이 가능한 AI 상담 챗봇 기능 도입
- (매칭 자동화) 창업기업 상담내용 및 자문단 정보를 AI 기반 분석하여 창업기업 상황에 맞는 전문가 자동 매칭(~'26.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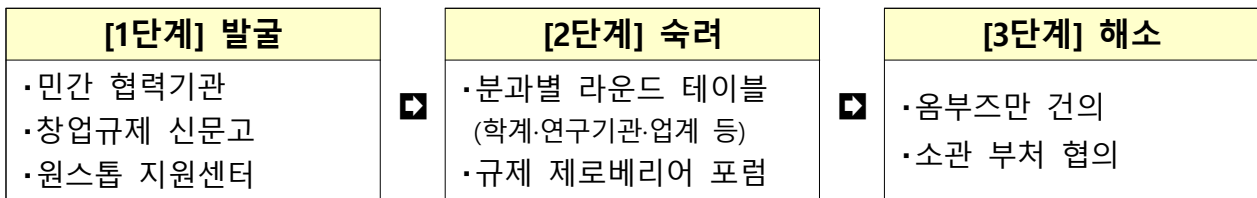
5 신산업 규제 발굴 체계 마련

◇ 신산업 스타트업의 중점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‘발굴-숙려-해소’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
□ 신산업 규제 선제 대응체계 마련

- (신산업 규제 분과 운영) 스타트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상시 규제 발굴 채널(신산업 규제분과) 운영
 - * 협력기관(안) :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벤처기업협회 등 협업
- 협력기관(규제분과)와 산업군별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중점규제를 지정하고 총 3단계 절차로 해소 노력 체계 마련

< 신산업 규제 3단계 발굴체계 >



□ 발굴 규제 심층검토 및 공론화

- (라운드테이블) 발굴한 규제를 정제하고 규제소관 부처에 전달 및 개선안 검토 요청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정제 작업
 - * 라운드테이블 : 학계·연구기관·전문가·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산업 규제를 함께 검토·논의, 부처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정제된 개선안 마련 목표
- 시급성·확산성·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 라운드테이블을 4개월 주기로 반복 추진(업종별 3~4회)
- (Start Zero-Barrier 포럼)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제한 핵심규제와 해당 소관부처의 의견을 대외에 안내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
 - * 스타트업, 대기업, 학계, 연구기관 이외에도 국회 및 관계부처 참여 유도
- (해소노력) 발굴·숙려 단계를 거쳐 확정된 규제개선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 및 소관 부처와 협의·조정하여 최종 합의안 도출 기대
 - * '25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(유O택 과장)

6 혁신·딥테크 분야 창업지원 확대 (국정과제 34)

◇ AI, 로봇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·맞춤형 지원(실증 등)을 통해 유망기업으로 스케일업

□ 딥테크 지원 프로그램 신설·확대

- (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) 창업패키지 내 딥테크 중점 5대 분야* 지원 트랙을 통해 高 기술 분야 창업기업 집중 지원(256개사)
 - * 5대 분야 : ①빅데이터·AI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 모빌리티, ④친환경·에너지, ⑤로봇
- (투자 연계) 일반 기술창업 대비 지원금을 상향(초기1→1.5억원, 도약2→3억원)하고, KVIC 매칭펀드 연계지원*을 통해 딥테크 창업발판 마련
 - * 선정기업에 SAFE(지분 조건부 인수계약)방식으로 보조금의 1~2배 내외 투자 연계
- (전문지원 확대) 딥테크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및 인증취득 등 지원
- (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) 대학의 전문성과 창업지원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 분야(딥테크, 방산) 창업중심대학 운영 (3개 대학, 35개사 지원)
- (딥테크) '25년 시범 운영한 딥테크 특화 대학을 확대*(1개→2개)하고, 딥테크 분야의 대학발 창업기업 육성 (2개 대학, 25개사)
 - * 과학기술특성화대학 中 공모를 통해 신규 딥테크 특화 선정·운영
- (방산) 특화 대학 신설을 통해, 스타트업 발굴·육성(1개 대학, 10개사)

□ 6대 전략산업('ABCDEF') 중심 '초격차 프로젝트' 고도화

- (신산업 재편) 정책 방향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, 'ABCDEF'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점 지원 분야 재편 (629개사)
- (딥테크 프로그램) 기술 고도화, 개방형 혁신, 투자·글로벌 진출 등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·고도화
- 특히, 공공시장 진출(B2G), 독자 파운데이션 LLM AI 스타트업 협업 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및 AX 확산 집중 지원

7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지속

◇ 민간 역량(시장 수요) 과 정부 역량을 한데 묶어, 글로벌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高 성장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

□ 민간 투자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체계화

- (지역·글로벌 지원 강화) 비수도권 소재 유망 초기기업의 틱스 유입 활성화 및 틱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제고(860개사)
 - (비수도권 확대)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틱스 유입을 위한 지원기업 규모 확대(50→65개) 및 투자유치 요건 완화(5→1천만원)
 - * 지역 창업페스티벌(IR 경진대회) 우수자 우선 지원 등 프리 틱스 연계
 - (글로벌진출 지원)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틱스 투자 인정 범위*를 확대하고,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브랜드화 추진
 - * (기존) 해외 VC 투자 30만불 → (개편) 기존 + 해외 공공펀드 30만불
 - ** 해외 주요 전시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중심으로 통합 브랜드(틱스 사절단) 구성
- (평가 효율화) 사업화·마케팅 지원 평가절차(대면→서류 중심) 간소화

□ 개방형 혁신을 위한 연계 · 협력 강화

- (민관협력 고도화) 단계별 성과 기반 지원체계* 구축(후속 지원 신설), 수요기업↔스타트업 간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** 고도화
 - * (기존) 발굴 협업과제 중심 단편적 지원 → (개편) 우수 협업과제 대상 후속 지원
 - * (온라인) 기술거래·M&A 등 플랫폼 연계 (오프라인) 민관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구축

<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유형 >

지원유형	지원내용
전략과제 해결형	■ 민·관 협력을 통해 전략 협업 분야 과제를 발굴·공모하여 스타트업 협력 지원
민간 선별추천형	■ 민간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연계, 공동으로 스타트업 발굴·지원
상호 자율탐색형	■ OI 마켓을 활용한 수요기업-스타트업 협업 관계 구축·지원
이 챌린지	■ 중견 및 방산기업의 우수한 협업 과제 선정 후 스타트업 매칭·지원

- (대외 협력 강화) 타 부처, 공공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실증 기회 제공 등 사업 시너지 제고(복지부, 방사청 등)
 - * 대·중견기업 등 수요기업 규모(개사): ('24) 57 → ('25) 83 → ('26) 83 ↑

8 글로벌 化 촉진을 위한 지원 고도화 (국정과제 34)

◇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 지원과 현지 밀착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촉진

□ 글로벌 진출을 위한 빅테크 협업 확대

- (Around X 확대) AI 분야를 강화하고, ABCDEF 등 6대 전략분야는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(13개→17개사 협력, 450개사)
- 협력 방식 다각화 및 프로그램 유형을 세분화(CVC 트랙 등)하여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간 상호협력 체계 고도화(18개 프로그램)
- * 해외 수요처 발굴, 기술검증(PoC) 및 M&A·Exit 경로 제공 등

< 기업별 전략분야 현황 >

AI				
 NVIDIA	 Microsoft	 aws	 IBM	 ORACLE
 intel	 L'ORÉAL			
Bio	Contents	Defense	Energy	Factory
 DASSAULT SYSTEMES	 Google Play	 Ansys	 THALES	 Air Liquide
		 Ansys	 SIEMENS	

- (글로벌 지원체계 구조화) 글로벌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하여 해외시장 탐색부터 투자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(180개사)
- * 탐색(GTM, Go to market) → 성장(범부처 연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) → 스케일업 (AI 분야 투자형 액셀러레이팅)

□ 인·아웃바운드 창업 인프라 확산

- (해외 접점 강화) 유관기관 협력 해외거점(실리콘밸리)을 통해 스타트업-빅테크 현지 기업 매칭 및 월별 네트워킹 등을 본격 운영
- 글로벌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거점 단계적 확대
- (외국인 지역 거점 마련) 지역 스타트업의 (아웃바운드)해외진출 지원 및 (인바운드)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을 위한 글로벌 창업인프라 확대
- 권역별 외국인 창업 수요 및 지역경제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'26년 중 비수도권에 추가 조성 예정(1곳)
- * 외국인 창업인프라(GSC) 성과 : '24.7월 개소 이후 122개국의 1만여명 이용

9 수도권 수준의 지역 인프라 구축 [국정과제 34]

◇ 전 국민이 창업에 도전하고,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수준의 집적 공간 조성·운영을 통한 창업 열기 확산

□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

- **(창업도시 조성)**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 기능·역량을 집중하여, 지역 특색(특화기술 등) 기반의 창업거점 조성 지원('26년 4곳 예정)
 - 지역의 기술, 투자, 지원 등 혁신자원(기능)의 연결·집적을 통해 각 지역별 특색에 기반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촉진

* 창업도시 모집·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핵심지표 마련(~'26.上)

- **(스타트업 파크)** 입주·투자·네트워크 등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가 집결되어 있는 융합형 창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차질없이 추진(8곳)



* 개소 : 인천('21년), 천안(부분 개소, '22년), 대전('25년) / 조성 중(~'27년) : 경산, 부산 / 신규 구축 예정 : 제주, 전주, 울산

- **(제조창업 공유공장)** 제조 창업기업 대상, 공간·장비 등을 지원하여 원가·공정·품질을 개선하는 제조창업 공유인프라 구축 추진(6곳)

* 조성 중(~'26년) : 충북 청주, 경북 포항 / 신규 구축 예정 : 대구, 경기 시흥, 전남 광양, 경남 사천

□ 지역 주력산업 연계 창업프로그램 고도화

- **(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)** 권역별 창업중심대학 11개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('26년 550개사 내외)

- 지역 내 생애 최초 창업지원 연령(29→39세) 기준을 확대하고, 대학 내 교원·재학생 추천 권한 강화 등을 통한 대학발 창업 유도

- **(지역 프로그램 고도화)**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등 혁신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

- ‘창업-BuS’ 프로그램을 전 창경센터(8→17곳)로 확대, 연중 상시 지역 창업자를 보육하고, 투자 유치까지 지원
- ‘딥테크 밸류업’ 발굴기관을 비수도권으로 확대, 창경센터 파트너 대기업*과의 밋업데이 운영 등 지역 내 다양한 협업 기회 제공

* 네이버, 삼성, SK, 현대, 한화 등 15개 대기업 (중복 제외)

<참고> 전국 단위 창업지원 역량 보유기관 현황

□ 창업지원 역량 보유기관 현황

⇒ 중앙부처, 지자체, 민간·연구기관 및 대학 등 전국 1,232개 분포

< 유형별 기관 현황 >

구분	중앙부처 산하기관	지자체 산하기관	특구 및 산업단지	대학	연구기관	민간기관	합계
기관 수(개)	34	71	19	286	13	809	1,232

- ① 중앙부처 산하기관(34개) : 부처별 정책 목적 및 산업별 전문성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기획·운영
- ② 지자체 산하기관(71개) :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보육 공간 제공 및 지역 소재 창업기업을 지원
- ③ 특구 및 산업단지(19개) : 산업·연구 인프라가 직접된 공간을 기반으로 연구개발·실증·사업화·보육 등을 지원
- ④ 대학(286개) : 창업기업 및 교원 창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 등 창업 전담조직 운영
- ⑤ 연구기관(13개) : 보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대상 기술 이전·공동연구 등 지원
- ⑥ 민간 창업지원기관(809개) : 전문 투자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사업화, 스케일업 등 지원

* 엑셀러레이터(488개), 벤처캐피탈(258개), CVC(22개),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기업(67개), 민간 협단체(14개), 총 809개(중복기업 제외)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지속 노력

□ 추진현황

※ '25년 자체 점검결과 제3자 부당개입 활동은 미확인

- 신청서류 표준화·간소화, 발표평가 강화* 및 민간 협력체계**(크몽 등) 마련 등을 통해 창업사업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노력

* 대표자 직접 발표, 사업계획의 진위여부, 대표자 역량·자질 평가지표 적극 반영

** 컨설팅 업체 대상 브로커 모니터링 및 불법 컨설팅 근절 캠페인 등 추진

□ 이슈사항

- 정부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비·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의 사업계획서 대필 등 대가성 개입 우려

※ 제3자 부당개입 활동 예시 : 창업기업 A는 "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선정에 훨씬 유리하다"는 말에 현혹되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청을 진행하여 창업지원사업 선정

□ 제3자 부당개입 근절 강화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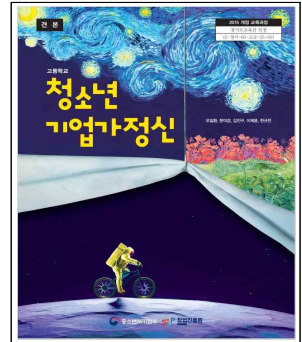
- (시스템 고도화) AI 기반 사업계획서 중복성 탐지 시스템* 구축('26.1)
 - * AI 기술(AI-OCR) 탑재를 통해 문맥·의미·이미지 등의 중복성 판단 기능 구축
- (실태점검 정례화) 사업계획서 대필, 평가정보 누설 등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, 적발시 강력 제재
 - 창업사업 신청 전후 시점에 평가위원의 컨설팅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, 창업기업 대상 컨설팅 목격 및 경험 조사(연중 2회)
- (분위기 조성) 평가위원 교육 강화(이해관계자 회피), 민간 플랫폼 협업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불법 컨설팅 근절 분위기 조성('26.1~)
- (신고 채널 가동)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채널*을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 신고 독려('26.1~)

* 창업진흥원 누리집 - 고객광장 - 제3자 부당개입 신고

2 창업 확산,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

□ 추진현황

- (개발·승인) '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「청소년 기업가정신」 정규 교과용 고교 인정도서 개발 및 경기도교육청 승인('25.2월)
- (시범운영) '25년 1개교(삼괴고*, 경기 화성)에서 고등학교 3학년(35명)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를 최초 도입하여 시범운영(주 3회 수업, 회당 50분)



* '05년부터 비즈쿨 학교로 활동 중이며, 교과서 집필진(오일환 교사)이 수업 진행

- 고등학교(294개교)에 교과서 책자를 배포(774부)하여, 기업가정신 과목 편성 검토를 위한 진로담당자 등의 관심 유도

□ 중점 추진 사항

- (개정·확대)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 편성 추진('27.~)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서 개정·승인 필요(~'26.6월)

* 현재 '2015 개정 교육과정'으로 승인받아 고교 3학년에 한정하여 편성 가능하며, '2022 개정 교육과정'으로 교과서 개편

- (실습·체험) '26년 교과서 도입예정교*(10개)를 대상으로 이론 중심 교육 외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실습형 교육 지원

* (일반고) 2개, (특성화고) 7개, (특수학교) 1개

- (홍보·확산) 교과서 도입 확산을 위해 대상별(학교장, 장학사, 교사 등) 맞춤형 홍보 추진* 및 교사 대상 교과서 체험교육 지원하고,

* 대상별 온·오프라인 설명회 추진 및 맞춤형 홍보자료(리플렛) 제작 등

-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를 통해, 기업가정신 과목 편성 확산
- 또한, '26년도 비즈쿨 학교 운영기관 모집 시 교과서를 도입한 고등학교에 한하여 선정평가 우대(가점) 부여

V. 기관별 경영관리실적

① 안전 및 재난관리

- (예방중심의 안전관리) 정례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
 - 월간점검(월 2회) : 4·4·4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4일, 14일마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기별 중점* 안전사항 점검
 - * (예시) 12월 : 동절기 보행로 결빙 및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면 집중 점검
 - 반기점검(연 2회) :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반기별 의무 법적 이행사항 점검으로 안전사고 Zero 유지 및 관리
 - 연간점검(연 1회) :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시행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하고,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
 - * 77건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29건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
- (사이버 안전 노력) 통합 로그 관리, 백업 및 매체(정보 유출) 제어 솔루션 고도화로 시스템 보안과 데이터 복구 체계를 강화
 - 개인정보 암호화와 유출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사고 대응력 확보
 - * 중기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: 3년 연속 '탁월' 등급 획득('23~'25)
 - 개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: 3년 연속 'A' 등급 획득('22~'24)

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

- (지역창업 활성화) 지역 창업문화 조성과 지역기업 성장 기회 제공
 - * 창업기업 멘토링 : ('24) 31회 → ('25) 94회 상담 진행 / 구매상담회 : ('24) 103회 → ('25) 202회 매칭 / 제품 전시 : ('24) 5개 → ('25) 7개 기관지원
 - 지역 내 대표행사*와 연계하여 지역 창업기업 제품·서비스 체험전, 판매·홍보 부스 운영 등 판로 개척의 기회 마련
 - * 2025년 세종한글축제 혁신성장기업 체험마당 체험객 기준 약 2,000명 참여

- **(지역경제 활성화)** 지역 내 농가, 자활기업 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①ESG 역량 강화, ②실질 구매 연계 등 병행 지원
 - * ① ESG 컨설팅 : ESG 역량 개선이 필요한 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및 피드백 제공
 - ② 제품·서비스 이용 캠페인 : 임직원·협력사 대상 구매촉진 등을 통한 실질 매출 연결
- 인재 채용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서류전형 평가 가점 부여
 - * 지역인재 채용 비율(%) : ('23) 19% → ('24) 37% → ('25) 75%
- 국가 할인 축제 참여* 및 사내 소비 캠페인 추진** 등 지역 점포 중심의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상권 매출 증가에 기여
 - * 동행축제, 코리아세일페스타, 숙박쿠폰 배포 등('25.10.29 ~ 11.9)
 - ** '모두의 소비 챌린지' : 지역 내 점포에서 임직원의 자발적 소비 분위기 형성
- 세종 및 인근 지역 8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, 사회적 가치 창출
 - * 헌혈, 환경정화, 기부, 취약계층 지원 등 임직원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역할 강화
→ 정부(복지부) 및 지자체(세종시, 대전시) 지역사회공헌 관련 표창 수상

③ 대국민 소통 노력

- **(고객만족도 제고 노력)** 고객만족경영시스템(ISO) 인증 취득, 만족도 하락 사업 집중 관리 등으로 최근 3개년 연속 우상향 추세
 - * 최근 3년 고객만족도 결과 (기재부, 점) : ('22) 87.8 → ('23) 89.2 → ('24) 89.4
- **(국민기자단 운영)**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소리 기자단*을 선발하여 창업 관련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
 - 일반취재, 디자인, 영상, 선임기자 분야로 나누어 총 15명을 선발하여 창업현장 취재 및 콘텐츠 100건 이상 제작
 - * 창업소리 기자단 : '창업'진흥원 '소'통 '리'포터의 줄임말로, 창업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전하는 창업진흥원 국민기자단
 - ** 창업소리 기자단 선발 현황 : ('24년) 12명 → ('25년) 15명
- **(국민 참여 공모전 추진)** 전국민 대상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 경험 및 우수사례 등 '창업 수기·영상 공모전' 운영
 - * 창업 동기, 창업 이후 삶의 변화 등 창업 스토리를 주제로 총 8건 선발

Ⅵ.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

①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활용도 제고 (국회)

- (주요내용)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제도 신설 이후 발급 건수 저조
 -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, 절차, 인터뷰 환경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현장성 있는 제도 개선 요구
 - (개선계획) 신청 경로 확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,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(설명회 등) 추진
 - 거주 국가별 시차 등을 고려한 심사 환경 개선('25.1.)과 관계부처(법무부) 협의를 통해 신청 경로* 확대('25.9) 완료
- * 추천 : 정부 부처 → 정부 부처 외 지자체 및 민간기관(AC) 등
신청 : 외국인 창업자 직접 신청 → 지자체 및 민간기관(AC)이 대리 신청

② 부정수급 의심 점검 조치 (국회)

- (주요내용) 창업사업 주관사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외부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점검 등 후속 조치 요구
 - (개선계획)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, 투자 과정상 운영사의 개입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예정
- * 현장점검 시행 후, 세부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의뢰 완료

③ 창업생태계 냉각기에 대한 대응 방안 (국회)

- (주요내용) 창업활성화를 위한 단·중장기적 대응 방안 고민 필요
- (개선계획) 딥테크 창중대 지정, 글로벌 빅테크 협력 Around X 확대 및 창업도시 조성 등 창업관련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,
 - * 국정과제 34번 “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”
- 자체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창업정책 발굴 노력